툭하면 고소·고발 '피곤한 사회'

광주 지난해 1만8233건중 5050건 반려

경찰 수사력 낭비·주민 갈등만 조장

#김모(여·35)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주웠으나 복잡한 집안 문제로 바빠 이를 주인인 박모(31)씨에게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돌려줬다. 박씨는 김씨가 여러 차례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며 경찰에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사정이 이해가 된다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했다.

#정모(61)씨는 수일 전 자신의 딸(30)과 광주 서구문화센터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딸의 남자관계가 안 좋다"고 말했다며,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딸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으며, 조사 결과 정씨는 10여 명을 비슷한 이유로 고소한 적이 있는 '고소꾼'이었다.

#이모(54)씨는 이미 횡령으로 고소돼 기소된 박모(55)씨를 다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를 압박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각하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수사력 낭비와 함께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011년 1년 동안 무려 5050건의 고소·고발·진정사건을 각하·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하·반려된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인이 경찰의 공권력을 빌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커지는 등 지역사회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서 등 5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모두 1만8233건이며, 이중 무혐의·고소 취지 잘못 등으로 접수가 반려된 사건은 5050건으로 27.7%나 차지했다. 4건 중 1건 이상이 '의미가 없는' 고소라는 것이다.

관할구역이 넓고 주민 수가 가장 많은 북부경찰에 고소 4418건·고발 559건·진정(탄원) 1514건 등 6491건, 서부경찰에 고소 2115건·고발 440건·진정(탄원) 1335건 등 3890건, 광산경찰에 고소 1932건·고발 343건·진정(탄원) 1020건 등 3295건 등이 접수됐다. 또 동부경찰이 2479건(고소 1314건·고발 194건·진정 971건), 남부경찰이 2078건(고소 1358건·고발 207건·진정 5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고소 남발로 인해 정작 중요사건 처리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들 사건의 반려나 취하 전 사건 개요 파악, 당사자의 의견 개진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을 고의로 골탕을 먹이려하거나 경찰의 공권력에 의존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고소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이나 금전 다툼으로 인해 소액을 받아내기 위해 접수하는 고소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불법 현수막 수거 합니다 광주 북구청 광고물 관리팀 직원들이 13일 두암동의 한 이면도로 안전펜스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북구는 3월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만채교육감 검찰 수사 의뢰

순천대 총장시절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교과부 감사서 적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 교육감의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장 교육감과 함께 교직원 A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순천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 등으로 지정 기부를 받아 장 교육감과 학교 교직원 A씨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또 순천대학술장학재단 측이 사업 목적에 없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교육감의 개인 계좌로 총장 재직 시 월 300만원씩 모두 78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받은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며 "2006년 10월 총장 취임 이후 대학발전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수주 등 대외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한 학술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 300만원의 대외 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기금에서 총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례는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수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었으며, 회계처리상 정산이 요구되지 않아 영수증 처리를 하지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고, 전기료 아끼려던 60대 촛불 켜놓고 자다 화재로 사망

전기료를 아끼려고 켜놓은 촛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집안에 있던 60대가 불에 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8시55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으나 세입자 김모(63)씨가 숨졌다.

또 집 내부 64㎡가 불에 타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씨와 함께 같은 건물에서 세들어 사는 주민 강모(51)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김씨 몸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변변한 직업 없이 홀로 살아온 김씨는 최근 5개월 동안 집세와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생활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영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 감정하도록 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64)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미 구속된 고미술협회 김모(73) 이사에게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인 뒤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로부터 억대의 도굴 문화재 30여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산강 죽산보 물고기 떼죽음"

환경단체 주장에 익산청 "조사 중"

영산강 사업 구간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했다는 주장이 나와 환경단체와 당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영산강 사업 2공구 죽산보 하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는데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청은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7~8일 나주시 다시면, 공산면 일대 3㎞ 구간에서 붕어, 잉어, 누치 등 수천마리가 강가로 떼밀려 왔다"며 "폐사한 물고기를 1t 트럭으로 거둬간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물고기 폐사가 일부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며 "오염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환경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민주의 종 파손 알고도 용접 납품

제작자 사기혐의 입건

시민 성금 등으로 제작된 '광주 민주의 종' 제작자가 사기 혐의로, 검수 책임자인 '광주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광주 민주의 종과 관련 수사한 결과 제작자인 원모(70)씨가 2005년 10월 납품 전 종이 깨진 사실을 알고도 용접해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추진위에 파견된 검수 책임자 박모(46)씨는 중요계약내용인 비파괴 검사, 중량 검사 등 검수도 하지 않고 종의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에 균열이 있고 중량이 미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종 설계를 맡은 서울대 정밀기계연구소에 의뢰해 납품되기 전 종이 깨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종의 무게는 경찰이 4차례 검사한 결과 30.5t의 허용 오차 범위에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인 관련 광주시 공무원 수천만원 받아 구속 영장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3일 총인저감시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청 고모 사무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공사 선정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고씨는 지난해 3월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오롱글로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사무관은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 검찰은 추가로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파트너 소개 안해준다 60대가 폭행

쌍나팔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60대 남성이 보름이 지나도록 여성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며 업체 사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차모(69)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카페 앞에서 결혼정보업체 사장 김모(43)씨를 폭행했다는 것.

○…차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6일 광고를 보고 100만원을 내 업체에 등록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은 커녕 전화까지 피하는 것 같아서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